

인천의 도시 정체성과 도시비전에 대한 성찰

이 희 환*

〈차 례〉	
I. 근대 이후 인천의 지정학과 도시 정체성	III. 역대 시정부의 도시비전: '도시 기업가주의'
II. 메트로폴리탄 인천의 형성과 특징	IV. 결론: 인천의 도시비전과 정책에 대한 성찰 -외형적 성장을 넘어 내적으로 성숙한 도시로

핵심주제어: 인천, 압축, 팽창, 도시정체성, 도시비전, 도시기업가주의, 기후위기

I. 근대 이후 인천의 지정학과 도시 정체성

이 글은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지정학적 특성을 근대도시 인천의 탄생과정과 함께 역사적, 공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21세기의 달라진 현실 속에서 인천의 추구해야 할 도시비전의 방향을 성찰적으로 모색하고 토론해보자는 제안을 던져보고자 한다. 급속한 압축, 성장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의 3대도시로 급성장한 인천은 여전히 성장주의적 시각으로 도시비전과 정책이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에 지역사회와 학계에 거칠게나마 던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먼저 근대도시 인천의 탄생과정부터 살펴보자.

1876년 일본과의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로 조선은 쇄국의 문을 열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부산, 원산항의 개항에 뒤이어 1883년에는 수도 한성의 수문인 인천이 개항되었다. 일본의 집요한 요구에도 인천 개항을 미뤘던 조선정부는 1882년 임오군란의 사후처리를 위해 일본이 체결했던 '제물포선후약정(濟物浦先後約定)'에 따라 인천의

2025년 12월 12일 접수, 2026년 02월 10일 수정, 2026년 02월 23일 게재확정

* 인천도시문화연구소장(Email: lhh400@hanmail.net)

제물포 지역을 1883년 1월 1일을 기해 개항할 것을 약속했던 것이다. 비록 세 번째로 만들어진 개항장이긴 하지만, 제물포 지역에 마련된 인천조계는 수도 한성의 해문요충이자 보장중지가 열렸다는 점에서 조선이 근대 세계체제와 교통하는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곧 수도 한성의 개방과 동시에 조선 전체가 제국에 개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1882년에 인천에서 조선이 서구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바야흐로 인천을 무대로 하여 조선에 근대적인 조약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물포에 마련된 개항장은 우선 외국인이 거주할 조계(Settlement)의 설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국주의 침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조계는 동아시아의 개항 과정에서 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제도이다. 인천에 조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883년 9월 30일에 일본과 조인된 ‘인천구조계약서(仁川口租界約書)’를 통해서였다. 제물포를 개항시킨 일본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제물포 해안 1만여 평 부지에 일본 전관조계가 들어선 것이다. 일본에 뒤이어 청나라도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1884. 4. 2)을 체결하여 제물포에 그들의 전관조계를 설정하였는데 지금의 북성동 일대 약 5천 평이 조금 안 되는 지역이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1884. 11. 7)이 체결되어 일·청 조계의 배후지 약 10만 평 부지가 각국공동조계로 설정되었다(〈그림 2〉)¹⁾ 참조.

그런데 중국, 일본의 조계와 비교하여 조선의 조계는 특이한 점이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조계가 여러 나라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조계 성격이 강한 반면에 조선에 설정된 조계는 전반적으로 일본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전관조계(專管租界)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²⁾ 조선 조계의 이러한 특성은 특히 부산과 원산을 비롯하여 인천조계에도 대체로 관철되었다. 제일 먼저 개항된 부산조계는 개항 이전부터 일찍이 왜관(倭館)이

1) 1898년에 출간된 藥師寺知騰·小川雄三 編, 『新撰 仁川事情』(朝鮮新報社)에 수록된 ‘仁川居留地之圖’이다. 청일전쟁 직후의 상황을 일본인의 시각을 투영하여 제작한 지도이다. 노란색 부분이 청국 전관조계, 분홍색 부분이 일본 전관조계, 하늘색 부분이 각국공동조계이다.

2) 이러한 추정은 향후 체계적인 비교연구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상하이 조계 설정 초기에는 영국, 프랑스의 전관조계가 설정되었지만, 조계가 꾸준히 확장되면서 이곳도 공동조계지이자 중국인이 대거 이주하는 잡거지로 변모하였다. 위엔진(袁進), “상하이는 왜 중국 근대문화의 중심이 되었는데가”, 『개항과 동아시아, 텍스트의 안과 밖』, 동아시아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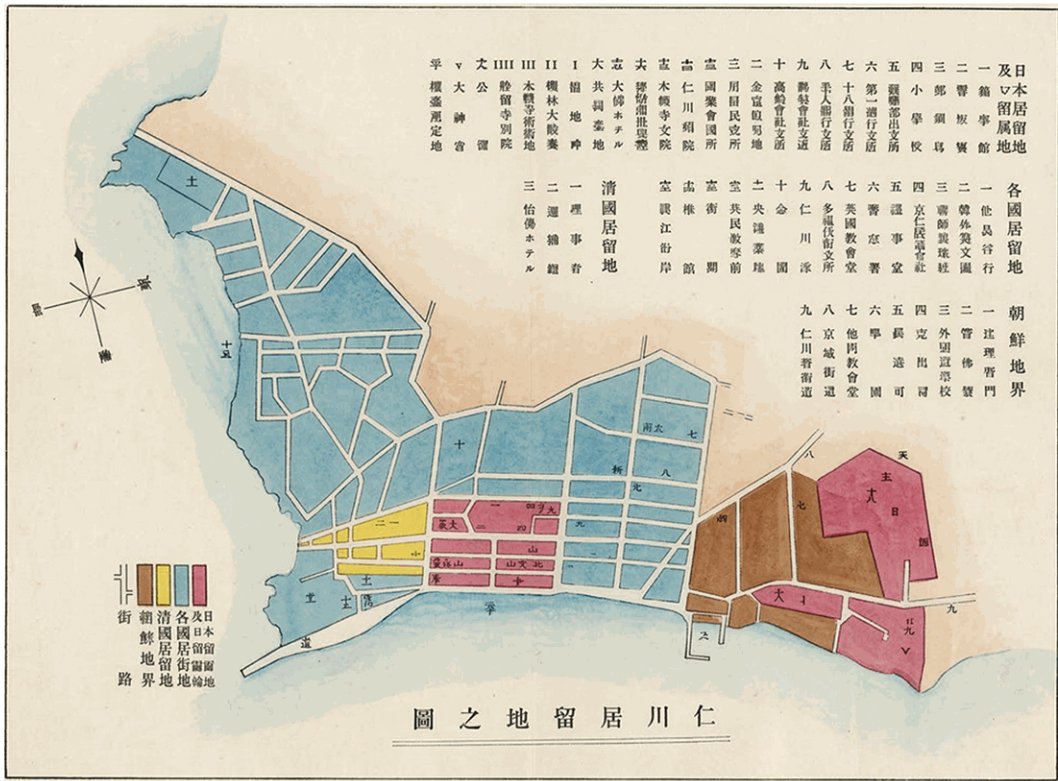


자료출처 : 한상복

〈그림 1〉 1900년 경인철도 부설 이후의 인천~서울 간 육로와 해로

설치된 지역으로 일본세력의 조선 내 근거지로 기능하였다. 1879년에 역시 일본에 의해 개항된 원산항은 동해안을 타고 남진할 러시아 세력에 대한 견제와 한반도의 자원을 반출할 목적으로 제한된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에 비하여 인천에만 유일하게 각국공동 조계가 설정되었고 러일전쟁 시기까지 이러한 성격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인천 내의 조계와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는 것과 함께 조계 밖으로 동아시아 개항도시들과 연계되는 교통네트워크도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제물포에 처음 국제기선 항로가 개척된 것은 1884년 영국의 자딘 매더슨(Jardine Matheson, 이화양행) 회사가 조선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선 한 척으로 제물포와 상해, 나가사키와 부산간 월 2회 정기 항행을 시작한 것이 최초이다. 그러나 이 항로는 개항 직후라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중단되었고, 이후 유럽 여러 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의 대상인들에게 배를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조선에 드나들었다.



〈그림 2〉 仁川租界 地圖(1898)

일본의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가 조선의 대외교통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2척의 기선을 운용하였는데, 나가사키-부산-원산-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동해선과 함께 나가사키-쓰시마-부산-제물포에 이르는 항로를 정기 운행하였고, 1891년 이후에는 5척의 기선을 운용하면서 일본과 조선, 중국 및 연해주 간 정기항로를 결손 없이 유지하였다고 한다. 청나라에서도 일본우선회사와 경쟁하면서 항해용 정크선을 조선의 서해안에 파견하였다. 1888년부터 중국상선회사(China Merchants Steam Navigation Co.)는 상해-지푸-제물포-우장-상해의 회항선을 설정하여 연평균 약 20회의 항행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에 임박하여 이 회사 선박들의 항행은 중단되었다.

1892년부터는 일본우선회사의 경쟁자로서 오사카상선회사(大阪商船會社)가 나타나

고베-부산 항로를 월3회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1893년부터는 고베-시모노세키-부산-제물포 항로를 2주마다 1회씩 운행하였다고 한다. 이들 회사의 경쟁은 날카로워서 1893년에 제물포에서 오사카까지의 미곡과 콩 1석 운임이 40센트였던 것이 그 해 7월에는 15센트로 폭락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이들 기선뿐만 아니라 유럽형의 범선과 나룻배까지 한국에 파견하였다.

- 1) 홍콩-블라디보스토크(상해, 지푸, 제물포, 나가사키, 부산, 원산을 거쳐) 3주마다 1회
- 2) 고베-블라디보스토크(시모노세키, 나가사키, 부산, 원산을 거쳐) 3주마다 1회
- 3) 고베-우장(시모노세키, 나가사키, 쓰시마, 부산, 제물포, 지푸, 태고를 거쳐) 4주마다 1회
- 4) 고베-천진(시모노세키, 나가사키, 부산, 제물포, 지푸를 거쳐) 4주마다 1회

위의 기선항로들은 청일전쟁 직후에 운행된 조선의 국제기선항로들이다.³⁾ 이들 기선항로를 이용하여 1860년부터 1900년대 초까지 조선을 방문한 여행자들이 다양한 조선여행기를 남겼다. 바야흐로 仁川租界를 중심으로 한국의 조계는 동아시아의 개항도시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1902년 12월 22일 대한제국 최초의 노동이민이 하와이를 향해 출발한 것도 인천 제물포항이었다. 깬릭호(S.S.Gaelic)를 타고 제물포를 출발한 101명의 한국 이민이 미국 땅에 최초로 도착한 곳이 하와이였기에 그 도착 날자인 1월 13일은 한국인의 미주이민사에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고, 하와이에서는 해마다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정하고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인천 감리교 내리교회의 지원 속에서 깬릭호를 타고 간 101명의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된 한인들의 하와이 이민은 1905년 8월 8일 몽골리아호까지 56회에 걸쳐 총 7,291명에 이르렀고, 1905년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전체 노동자 48,229명 가운데 한인은 4,683명으로 9.71%를 차지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한인 노동자들은 하와이에 있는 65개의 사탕수수 농장에 분산 배치되어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감당하였으며, 백인 감독 하에 노예와 같은 대우를 참아가며 일을 해야만 했다. 일본과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의 배척 속에서도 하와이 한

3) 러시아 경제성 사무국에서 *KOPEN*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조선에 대한 종합안내서(상트페테르부르크 : 1900)의 번역본 『국역 한국지』 본문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579-580쪽.

인 노동자들은 매우 고된 노동과 험값의 임금을 감내하면서 하와이에 정착해 해외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한인들의 미국사회 정착에는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근대도시 인천의 개방적인 도시정체성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도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한반도 내에서 수도 서울의 외항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이 근대전환기라는 역사적 상황을 통해 발휘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비록 제국주의시대 서세동점의 역사적 흐름 속에 놓여 있었지만, 인천이 근대도시로 탄생하고 급속하게 성장한 배경에는 인천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환경이 존재했다.

그러나 한반도는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로 인한 강점과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양진영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도래하면서 이를 결정짓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분단국가로 변모하였다. 동서냉전체제 하에서 인천은 전혀 달라진 지정학적 정체의 영향 속에 지속과 변모를 동시에 수행하는 도시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II. 메트로폴리탄 인천의 형성과 특징

1. 인천의 급격한 도시 팽창

냉전-분단체제 아래서도 인천은 수도 서울의 외항이자 산업화시대의 임해공업도시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1981년 7월 직할시 승격과 1995년 3월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도 인천 지역은 도시 지역의 확장을 멈추지 않고 급팽창해왔다. 그러나 인천 지역의 도심 확장이 근년에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통시대의 인천 지역은 지금의 문학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지금은 미추홀구와 남동구 일부 지역에 해당하였다. 조선시대 인천도호부가 설치되었던 문학산 일대와 함께, 계양산 일대에는 부평도호부가 별도의 전통 행정구역으로 독자적 삶의 단위를 이루었는데 지금도 부평 일대는 독자적 삶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

1876년 문호개방을 계기로 조선이 근대 세계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인천 지역에 밀어닥쳤다. 1883년 제물포항에 개항장이 마련되면서 이곳을 외국세력이 '새인천'으로 건설한 것이다. 원래의 인천 지역이었던 문학산 일대는 인천부가 아닌 부천군(富川郡)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것은 상징적이다.

구인천의 몰락과 새인천의 부상은 인천이 겪은 근대화의 극심한 격동과 더불어 전통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일한병합 이후인 1914년 통계를 보면, 당시의 인천이란 오늘날의 송림동, 창영동, 도원동 및 그 서쪽 향만지대에 한정된 6.05km²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1936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원인천 지역이었지만 부천군에 편입되었던 다주면(多朱面) 전역과 문학면(文鶴面) 일부가 인천부로 편입되었다. 1940년 4월 2차로 부천군 문학면 등 4개 면과 부평 일부가 다시 인천에 편입되어 그 면적이 165.82km²에 이르렀다.

해방 직후 잠시 '제물포시'라는 행정구역을 사용하기도 했던 인천은 한국전쟁을 겪고 난 이후 분단체제가 한반도에 자리잡자 국제항구도시로서의 기능이 크게 쇠퇴하고 급속히 수도권 임대공업도시로, 산업화 도시로 변모하였다. 산업화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이 이어지고, 1963년 1월에는 작약도가 인천



〈그림 3〉 인천의 시계 확장

에 편입되었다. 1981년 7월 1일을 기하여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고, 1989년 1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과 응진군 영종, 용유면이 새로 인천시로 편입되었다. 1995년 3월 1일자로 강화군, 응진군 전역과 함께 김포의 검단면을 통합하는 인천광역시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그 면적은 무려 958.24km²에 이른다. 그러나 인천 지역

은 지금도 끝으로는 시 외곽 지역으로, 그리고 바다로는 갯벌을 매립하여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끊임없이 도시권역의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2. 시간적 압축으로 성장한 인천

우리나라 근대화의 특징 중에 하나겠지만, 인천은 서구의 근대도시가 오랜 세월을 두고 거쳐 왔던 과정을 단기간 내에 압축하여 경험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인천이라는 도시의 몸체가 급팽창하는 과정과 병렬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도시의 독자적 특성이라 할 정체성이 미처 다져질 겨를도 없이 흘러온 과정이었다. 시간적 압축과 공간적 팽창이 인천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도시는 아마도 흔치 않을 것이다. 특히 인천은 수도 서울의 길목에 위치한 까닭에 부산과는 또 다른 도시적 특성을 갖는다. 시간적 압축과 공간적 팽창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산도 인천 못지않은 격동을 거쳐 왔지만, 수도의 관문에 위치한 항도 인천은 도시의 유동적 성격이 한층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좀 더 세밀한 논증이 필요하겠지만,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여타의 광역도시가 인근 지방에서 가지는 중심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성격이 전 통시대와 큰 단절 없이 근대 이후에도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 비추어보면, 근대도시 인천의 유동적 성격은 더 한층 두드러진다.

인천은 따라서 단일한 도시 정체성 대신에 유동성과 복잡성을 중요한 도시의 특성으로 갖는다. 이것이 때로 인천을 정체성이 없는 도시로 각인시킨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인천이 가진 역동성과 다양성 그리고 가능성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터이다. 이러한 인천의 도시적 특성은 인천이 급박한 변천과 급격한 팽창의 과정에서 광역시 내로 편입한, 각기 다른 문화권역의 특성과 그 문화적 자원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의 인천광역시가 형성된 역사적 과정과 그 생활권역을 감안할 때, 인천광역시에는 크게 여섯 개의 문화권역으로 나누어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인천의 역사가 발원하여 근대 이전까지 면면한 역사를 이어왔던 '원인천문화권역'(미추홀구, 남동구), 계양산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독자적 삶의 단위를 이루었던 '부평

문화권역'(부평구, 계양구, 서구), 선사시대부터 고려, 조선, 개항기를 거치면서 중요한 역사의 무대가 되었던 '강화문화권역'(강화군), 인천 앞 바다 및 옹진군의 도서 지역을 포괄하는 '해양문화권역'(옹진군), 근대 이후 제물포 개항과 더불어 '새인천'으로 건설된 '개항문화권역'(중구, 동구), 그리고 최근의 도시 확장과정에서 편입된 '신도시 문화권역'(연수구, 송도신도시, 검단 등) 등이 그것이다.

급격한 팽창과 변모를 거듭한 인천 지역의 특성과, 광역시로 개편된 최근 10년간의 급속한 도시재편을 염두에 둘 때, 인천의 문화권역을 위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아무래도 잠정적이며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인천 속의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한 공간적 구분이기에 시기와 특성에 따라서는 문화권역이 서로 겹치기로 하며 더 세분될 수도 있으며 이 또한 시공간적 상황에 따라 유동, 변모할 것이다. 그러나 인천 지역의 도시적 특성과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권역을 위와 같이 나누어 살펴보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

시간적인 압축과 공간적인 급팽창을 거듭해온 광역도시 인천은 따라서 도시환경적 차원에서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흔히 정체성 없는 도시, 언제든 기회만 되면 떠나고 싶은 오염의 도시로 인천이 기억되는 건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인천은 300만 시민이 살아가는 독자적인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과거 특정한 집단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압축되고 굴절되었던 인천의 시간과 공간의 맥락을 앞으로는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해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과 시민 생활세계 전면에 대한 문화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 복지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인천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다차원적 영역에 걸친 토론과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표 1〉은 인천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정체성이 지난 20세기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굴절되었으며, 21세기를 맞아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해야 하는지, 연구자가 개괄적으로 정리해본 것이다. 과거 20세기에는 급속적인 인천의 근대화와 도시팽창 과정에서 인천은 주인 없는 '뜨내기 도시'와 같이 도시 정체성의 혼돈과 정주의식의 부재에 시달려 왔다. 특히 강력한 중앙집권적 사회체제 속에서 수도 서울과 1시간 거리 내에 인접한 까닭에 인천의 고통은 배가되었다. 그러나 냉전

체제의 해체와 함께 21세기 들어 남북의 화해가 가시화되고 지방자치제가 더욱 내실화되는 가운데 인천의 도시적 정체성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표 1〉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미래 지향 구상

〈인천의 정체성〉	〈20세기〉	〈21세기〉
능허대, 항구, 갯벌 (해양성)	성장주의, 서울집중 (변방)	동북아 중핵 도시 (개방성)
공항, 개항장, 뜨내기 (사회성)	개발&경쟁, 사회갈등 (갈등)	공존공생 화합도시 (역동성)
전통/근대, 안과 밖 (다양성)	분단, 냉전, 획일화 (혼돈)	평화·교류 문화도시 (창조성)

관건은 인천시민들이 어떻게 인천의 공간 문제에 개입하여 다채로운 ‘공간의 문화 정치학’을 펼쳐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도시의 정체성은 결코 고정불변의 그 어떤 실체가 아닌,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는 새로운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인천은 어떤 도시정체성을 꿈꾸고 있는가? 그것은 지속가능한 도시,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를 꿈꾸고 있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인천시 정부의 도시비전: ‘도시 기업가주의’

1. 현 시정부의 성장일변도 도시정책

분단 이후 불행하게도 인천은 수도 서울 바로 옆에 있는 항구도시로서 공업도시, 산업도시라는 일률적 기능만 수행하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도시의 자생성과 독립성,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도 서울을 떠받치는 항구도시로서 바닷가 주변에 들어선 화력발전소들과 쓰레기매립지, LNG기지 같은 국가에서 필요한 온갖 환경유해시설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고, 고속도로와 철도가 도심 한복판을 횡단하며, 오래된 마을을 두 동강 내면서, 심지어는 주민들의 불안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삶터 바로 아래로 제2의 광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해도 아무런 항변을 해주지 않는 불편하고 흉측한 도시가 되어 버렸다. 2015년 매립이 종료하기로 협약이 돼 있던 서구 쓰레기매립지를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4자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주고받으며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연 인천 주권시대에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조차 국가로부터 수백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아 추진됐던 부산북항 재개발사업과는 형평성 차원에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독자적인 지역적 정체성과 자립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차례 낙선 이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정복 시장은 전임 임기 시절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었을 때 “인천가치재창조”와 “인천주권선언”을 정책의 주요 기조로 내세우던 것과는 달리 민선8기 시장이 되자마자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세계10대도시 인천”을 시정목표로 내세울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1000만 도시 인천”을 내세우며 성장제일주의 시정을 적나라하게 현시하고 있다. 지난 7월 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750만 재외동포의 정책 수립과 지원 등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이 개청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시행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 서비스정책 이행 등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재외동포청은 151명의 조직 규모로 출범했으며 본부는 인천에, 재외동포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인천과 서울에 각각 설치했다. 인천시는 출범식에 이어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유엔(UN)광장에서 재외동포청 출범 기념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1000만 도시 인천 비전’을 선포한 것이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구상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다. 인천시는 시 조직 내에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을 설치하면서 민선8기 시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다. 중·동구 원도심을 사통팔달의 도심으로 재창조하고, 인천 내항은 미래 인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며 ‘제물포

르네상스'를 민선8기 시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밀어붙였다. 유정복 시정부는 또 '뉴홍콩시티'라는 프로젝트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함께 제기하며 인천의 내항, 영종, 강화 일부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특히 영종도를 동아시아의 금융 상업도시 홍콩에서 자본이 대규모로 이탈할 것을 수용하는 동아시아의 뉴홍콩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 또한 수십억 원을 들여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했지만, 갑자기 뉴홍콩시티 시책이 사라지고 '글로벌 톱텐도시' 시책이 나오기도 했다.

이렇듯 유정복 시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으뜸 공약으로 선전해온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뉴홍콩시티'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그 구체적 목적이나 사업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분명히 발표하고 지역사회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채 계속 구상안이 오락가락 하면서 자가발전을 계속해왔다. 또 해양수산부가 사업권을 갖고 있는 인천내항 1·8부두재개발사업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인천시가 매입해서 추진하겠다고 요란하게 발표됐는데 2023년 말에는 갑자기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용도를 보존 용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는 발표되기도 했다. 자본이 탈출하고 있는 홍콩을 대신해 영종도에 '뉴홍콩시티'를 건설하겠다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용역을 맡긴 이후 언론에 회자되는 것이 슬금슬금 잠잠해지는 대신 '제물포 르네상스'가 시정부의 핵심정책이자 인천을 일거에 세계 초일류 도시로 부상시킬 만병통치약 같은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안상수 시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중심도시 인천'(송영길 시장)이라는 시정구호를 비약, 초월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이라는 시정 슬로건이 과연 인천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 속에서 맞느냐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 슬로건에는 이미 강렬한 성장제일주의 담론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읽어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도대체 대한민국과 인천은 언제까지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성장과 발전 일변도로 치달아야만 하는 것일까? 과거 공해도시 인천, 문화의 불모지 인천, 이부망천(移富亡川)의 도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떠나고 싶은 도시 인천,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 사회에서 널리 회자된다는 "마계도시 인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는 제발 시민들의 삶의 복지와 균형발전, 역사와 문화와 여가가 살아 숨 쉬는 그런 자족적이고 평온한 삶의 도시가 되어야 할 텐데,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이 시정목표다. 연일 언론에서는 인천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신산스런 삶의 고통이 보도되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사태가 전국적으로 회자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양극화와 빈곤으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과 주장들이 난문하고 있는데, 인천시청의 시정목표는 언제까지나 토건주의, 경제제일주의, 성장만능주의의 미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가시적으로 구현할 민선8기 시정부 제일의 공약이자 정책이 바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잇따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뉴홍콩시티'다. 그런데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제8회 6.1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후보였던 심재돈 후보가 처음 공약으로 제안했던 내용에서 시작됐다. 심 후보의 공약을 단일후보로 선출된 유정복 시장이 자신의 공약으로 삼으면서 '뉴홍콩시티 인천'과 함께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공약으로 다듬어져 민선8기 시정부의 대표공약이자 대표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선거 기간에 주목을 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공약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당선 이후 인천시 제일의 정책으로 채택된 것인데, 정책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공론화 과정은 취임 이후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의 1호 공약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된 이후 사후 토론회를 몇 차례 거치면서 살이 붙고, 그것도 모자라서 20억 원이 소요되는 용역을 통해 뒤늦게 정책의 구체적 모양새를 갖춰가겠다는 것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렇게 획기적인 것 같으면서도 급조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책이 경제의 성장만능주의와 정치의 성과주의와 만나서 빚어질 개발만능주의의 폐해와 밀어붙이기로 인한 갈등이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 대상지역으로 유정복 시장이 언급해왔던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구역만 해도, 지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하며 합의해온 시민사회의 여론이 존재한다. 공장과 항만으로 차단된 도심의 바다, 해양도시 인천의 폐쇄된 바다를 인천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항만재개발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십수 년간 논란을 거듭해오며 어렵게 합의된 이런 원칙과 합의는 전혀 무시되고 갑자기 내항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곳으로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 앞으로 또 어떤 사회적 논란을 빚을지 걱정스럽다.

유시장 취임 직후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마치고 인천 내항재개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⁴⁾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인천 중구 내항 일원 8.82km²(내수면 제외 6.06km²) 부지를 제물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할 구상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생활·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등 글로벌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위해 시는 기초 현황과 경제자유구역 추진 공간 범위 등 기본계획을 추려 인천경제청과 협의했다.

이 용역은 현재 추진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긴밀하게 연계돼 진행된다고도 밝혔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내항 일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방향과 방안 등을 개괄적으로 마련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 용역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이를 통한 개발 전략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제물포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비롯해 관련 산업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 개발계획과 전략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나왔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계획으로는 용역에 착수해 오는 2025년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강화 남단, 수도권매립지 등 북부권과 송도유원지 일원에 대해서도 2025년 지정 신청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현재 강화 남단만 추진중이다.

2. 성장일변도의 ‘도시기업가주의’와 그 폐해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공간지리학자인 데이비드 하비는 『반란의 도시』(Rebel Cities)에서 도시공간을 둘러싼 자본의 독점지대 구축이 도시의 ‘집합적 상징자본’ 형성에 집중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4) 「‘제물포 경제자유구역’ 청사진 짚다」, 『인천일보』 2023. 8. 3.

독점지대를 뽑아내기 위한 명분을 쌓을 때는 언제나 강력한 사회적·담론적 요소가 작동한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런던, 카이로, 바르셀로나, 이스탄불, 밀라노,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가장 명백한 사례는 관광업일 테지만, 그렇다고 관광업만 살펴봐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합적 상징자본의 힘, 즉 어떤 장소에 특별한 차별성을 부여하는 행동이 가는 힘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말해 자본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유의미한 힘이다. (중략)

파리, 아테네, 뉴욕, 리우데자네이루, 베를린, 로마 같은 이름과 장소가 보유한 집합적 상징자본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상징자본은 볼티모어, 리버풀, 릴, 에센, 글래스코 같은 곳은 따라잡기 힘든 경제적 우위를 안겨준다. 뒤에 열거한 도시들은 독점지대를 낳은 독특함을 주장할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 상징자본 지수를 높여야 하고 또 뭔가 뛰어난 측면이 있다는 징표를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도시 ‘브랜딩’이 중요한 것이다.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무역 장벽이 낮아져 독점력이 사라짐에 따라, 독점지대의 기반인 집합적 상징자본을 둘러싼 투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⁵⁾

하비는 도시가 자본의 잉여생산물이 사회적, 지리적으로 집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시공간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최근 수십년 동안 신자유주의 도시화가 전개됨에 따라 약탈에 의한 축적을 비롯해 도시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양상들을 설파하고 있다. 위 인용문은 자본의 전세계화 국면에서 나타나는 국제 금융자본가들이 독점적 수용을 올리기 위한 독점지대의 형성을 위해 지역의 개발과 집합적 상징자본을 형성하는 흐름의 일단을 지적한 대목이다. 하비는 이러한 국제금융자본의 흐름에 맞춰 도시정책을 펼치는 것을 ‘도시 기업가주의’라고 표현하고 있거니와, 도시 기업가주의는 공적 권력과 시민사회, 사적 이익집단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 일정한 유형의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관리하는 도시 거버넌스 방식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역 성장연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도시간 경쟁 및 지역간 경쟁에 극심한 상황에서 도시경쟁에서 이기려면 자본의 투자 과정을 원만하게 조율해 역동성을 살려야 하고, 적절한 장소와 시기에 핵

5) 데이비드 하비, 한상연 옮김, 『반란의 도시』, 에이도스, 2014, 183~184쪽.

심적인 공공투자를 집중하기 위한 ‘지역 레짐’(urban regime)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인천시가 깃발을 매립해 조성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위시한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면서 진행한 국제금융자본의 집중적 투자유치를 위해 자본의 독점적 초과이윤을 보장했던 경제자유구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에 적극 편승하려 했던 도시정책의 산물이다.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펼쳐진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와 독점적 이윤창출과정, 부정과 부패로 점철된 기업주의적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논문이 제출된 바 있거니와,⁶⁾ 이 시기 지역성장연합의 거점 역할을 한 인천시 정부가 표방한 정책 구호가 바로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시정슬로건 도시 브랜딩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성장제일주의 도시정책이 관철되는 사이 인천 곳곳에 남아 있는 공공자산들은 개발주의 정책으로 인해 멸실 위기에 처해 있다. 2017년부터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역사·문화유산의 파괴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준 사건은 2017년 5월 철거된 인천 중구 송월동의 애경사 건물의 철거였다. 애경사 건물은 최초로 비누를 생산하던 공장으로 1910년대부터 인천 동구 지역에 일본 식민자본이 형성하기 시작한 일군의 근대산업시설 중 하나였다. 붉은 벽돌조 건물로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애경사 건물을 철거한 주체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청장 김홍섭)이었다. 중구청이 애경사 건물을 매입해 철거한 명분이 가관이었다. 통영의 동피랑마을과 부산의 감천마을의 외피만 벤치마킹한 중구청이 수년 전부터 중구 송월동 원도심 마을에 갖가지 동화와 조형물을 채워 관 주도로 조성한 ‘동화마을’의 관광객들을 위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애경사 건물을 매입해 철거한 것이다. 뒤늦게 애경사 건물의 철거 계획을 알게 된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철거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언론들도 다투어 보도하면서 문제가 커졌지만, 중구청은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애경사 건물의 철거를 강행했다.

6) 梁峻豪, 「仁川市の「經濟自由区域」プロジェクトに関する考察 —「企業主義的」地域政策に対する批判的検討を中心に—」, 『地域経済学研究』 第31号, 日本地域経済学会, 2016. 6. 30. 참조.

그런데 인천 중구청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오래된 근대 건축물을 철거한 사례는 애경사가 처음은 아니었다. 중구 선화동에 1939년에 건립된 조일양조장은 최초로 일본식 소주를 생산하던 양조장으로,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한때는 축구팀을 운영할 정도로 번성했던 역사를 가진 양조장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인천의 도시개발 바람 속에서 원도심의 동네 한가운데 운영을 중단한 채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흉물이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2012년 중구청이 철거를 강행해 결국 주차장이 되고 말았다. 뒤늦게 조일양조장 표지석을 세워놓기는 하였지만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구청은 근대건축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에는 1904년에 설립된 인천기상대 건물 3채가 사라졌고, 2014년에는 중구 용동의 객주 함선지(咸善志, 극작가 함세택의 조부)의 가옥과 호프집 ‘마음과마음’ 건물이 동시에 철거돼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차이나타운에 남아있던 북성동 곡유린 주택과 일본 적산가옥 여러 채가 연거푸 철거되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2015년에는 1941년에 건축된 신포동의 옛 동방극장이 철거돼 주차장으로 변했으니,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구는 역사문화유산의 무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최초의 실내극장인 애관극장도 멀티플렉스 극장으로 변신하면서 개인기업이 생존을 모색해왔으나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자본에 더하여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 언제 건설자본에 매각되어 사라질지 모를 상황이지만, 인천시장 및 행정관료들에겐 그 가치의 위기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아 방치돼 있다.

애경사를 비롯한 이 모든 근대건축자산들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보존 명분이 없다는 논리로 주로 공공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인천의 경우는 이 법률에 따라 전수조사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공에 의한 공공적 유산의 파괴는 비단 역사·문화유산에 그치지 않고 진행되었다.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이들 역사문화유산과 자연유산들을 커먼즈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인천의 커먼즈 자산들은 관과 특정 기업, 개인들에게 의해 사유화되고 심지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인천 원도심에 남아 있는 마지막 포구인 북성포구도 반이 매립되었다.

IV. 결론: 인천의 도시비전과 정책에 대한 성찰-외형적 성장을 넘어 내적으로 성숙한 도시로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된 지도 오래다. 서울과 접한 인천은 그 어느 도시보다 서울공화국의 폐해 속에 신음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부망천’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일단이 담긴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까? 거대도시 서울 옆에 위치한 인천은 아직도 도시로서의 자족성이나 완결성을 갖지 못한 도시, 그 때문에 정체성도 없고 ‘이부망천’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하는 도시로 전락해 있다. 이 도시를 살리는 길은 서울과 경쟁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구태여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안온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자기완결성을 갖는 도시, 도시의 내발적 발전을 이루는 든든하고 내실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에 서울로 가는 전철을 연결하고 얼마나 빨리 서울로 갈 수 있도록 하느냐를 고민해서는 안 된다. 잠만 인천에서 자는 시민들을 위해 언제든 인천을 떠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정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제발 도시 외향적 성장이 아니라 인천의 원도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인천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내 인재를 키워 지역에서 후손들을 낳고 살아갈 수 있는, 생태적으로나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꿈꾸자. 이제 이를 위한 대대적인 토론을 인천 지역사회에서 벌일 때가 되었다.⁷⁾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10대도시라는 슬로건이 난무하지만, 인천시는 과연 이 같은 비전을 이끌어갈 전략은 용역 중이다. 시민들과 밑에서 다져지는 소통도 부재한 정치적 수사 속에서 아득한 목표만 인천시와 언론을 통해 증폭돼 왔다.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의 경우도 홍콩을 대체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도시 홍콩을 영종도에 만들자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유 시장이 지난 3월 발표한 프로젝트는 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한 데 모은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시는 민선5기 송영길 전 시장 때 추진하던 청라 하나금융시티 완성과 GCF와 연계한 글로벌 녹색기후금융도시 조성을 포함

7) 지역 내발적 발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오카다 토모히로, 『지역 만들기의 정치경제학-주민이 직접 만드는 순환형 지역경제』(한울아카데미, 2016), 「창조도시론 세계석학 사사키 마사유키(佐々木 雅幸) 교수 인천대 특별강연_지역 내발적 발전과 창조도시」(『시각』 2018년 9·10월호) 등 참조.

시켰으며, IPA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까지 프로젝트에 넣었다. 프로젝트엔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를 재조명해 역사적 관광명소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금융과 상관이 없고 연계산업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전쟁 아이템’이다. 남북 긴장이 완화되고 G2 국가인 중국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뉴홍콩시도 비로소 가능하고 초일류도시의 가능성이라도 비로소 열릴 텐데, 미국 일방주의에 기댄 현정부 아래, 유시장까지 민감한 인천상륙작전을 전승축제로 기리겠다고 북한을 적으로 돌리고 중국을 자극해서야 뉴홍콩시도가 가능할 것인가? 정책이 서로 조응하지 않는 불협화음을 연출하고 있다.

유시장은 지난 7월 5일 인천에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한 후 출범식에서 기존 300만 시민에 해외한인 750만 명을 합쳐 ‘1천만 도시 인천시대’를 열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내걸었다. 세계초일류도시, 세계10대도시라는 성장담론의 수식이 가닿을 수 있는 최고 높은 곳을 인천시민들 앞에 목표로 제시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다고 해서 인천의 인구가 1천만 도시가 됐다는 수사는 얼마나 위험하고 가식적인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탐텐 도시’,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도시의 입구마다 내걸린 이 화려한 이름들은 마치 잘 꾸며진 쇼윈도 같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텅 빈 진열장만 남아 있다. 도시의 언어가 이렇게 과장될수록, 그 안의 실체는 점점 더 희미해진다. 말의 과잉은 언제나 실천의 빈곤을 숨긴다. 인천은 지금 그 언어의 공허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도시의 정체성은 브랜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의 흔적과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그들이 남긴 삶의 곁에서 피어난다. 한때 인천은 개항의 도시였고, 산업의 도시였으며, 이주민과 노동의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의 인천은 그 기억 위에 덧칠된 인공의 언어로 스스로를 포장한다. 새로운 표어가 나올 때마다 지난 역사는 지워지고, 진짜 인천은 또 한 겹의 광고 아래 묻힌다.

정치인들은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비전은 대체로 임기 안에서만 유효하다. 도시의 이름을 바꾸고, 구호를 내걸며, 변화를 말하지만 그 변화는 대체로 문장 안에서 끝난다. 그 곁에는 언제나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그들의

전문성은 도시의 철학이 아니라 권력의 언어에 더 가깝다. 그들은 창조보다는 복제에, 비전보다는 이벤트에 익숙하다. 결국 그들의 ‘기획’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 정치인의 슬로건을 정당화하는 장식이 된다.⁸⁾

최근 인상 깊게 읽은 장동민 교수의 칼럼의 일절이다.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더해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권력이 서울에 집중된 서울공화국 시대가 여전한 가운데 인천은 어떤 도시 비전을 모색해야 하는가? 성장담론의 끝판왕이라 할 “세계 초일류도시, 글로벌 튼튼도시, 천만도시 인천”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는 게 첫 걸음이다. 그리고 장차 도래할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 대비하면서 이제는 내적으로 성숙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야 한다. 인류사회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시대에 인천시의 도시비전은 전혀 대비가 없어 보인다. 정전 70주년을 경과하면서도 여전히 북에선 대량살상무기를 쏘아올리고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를 미국의 군함과 전투기들이 날고 있는 시대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간절한데, 여전히 낡은 이념갈등을 대규모 전쟁 이벤트로 키워 갈등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펴는 인천시가 어찌 21세기 세계 초일류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인천의 도시비전과 그에 따른 정책을 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서울로 빨리 가는 기능도시에서 벗어나서 기후위기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삶터로 바꾸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설계할 도시비전과 정책의 원칙들을 세우는 데 있어 참여해야 할 다섯 가지 시민실천적이면서도 도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함께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1. 서울에 종속된 위성도시, 수도권 도시에서 벗어나 자족성과 완결성을 갖춘 인천 - 서울 옆의 위성도시이면서 동시에 수도권도시라는 이중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존정책

8) 장동민, 「가짜 슬로건의 도시, 인천이라는 거울」, 『인천in』 2025.10.10.

2. 대규모 탄소개발도시 인천에서 기후위기를 선도적으로 막아내는 해양생태도시 인천
 - 온갖 환경위해시설이 난립한 공업도시에서 저탄소녹색해양도시로 거듭나는 녹색 정책

3. 항만과 공항을 통해 세계인들과 교류하고 융합하는 국제문화도시 인천
 - 냉전시대 대결논리와 전쟁유물을 걷어내고 세계인과 문화와 관광으로 만나는 문화정책

4. 글로벌 경쟁에서 막강한 소상공 제조업과 대안경제 모델이 선순환하는 복지도시 인천
 - 낙수효과 없는 대기업 경제모델에서 소상공인과 녹색대안경제가 살아나는 경제 정책

5. 남북분단의 상처를 이겨내고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평화도시 인천
 - 바다와 육지에서 남북평화를 실현하고,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차별이 없는 화해 정책

참고문헌

- 러시아 경제성 사무국, 『국역 한국지』 본문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579-580쪽.
- 데이비드 하비, 한상연 옮김, 『반란의 도시』, 에이도스, 2014, 183~184쪽.
- 이희환, 『이방인의 눈에 비친 제물포 : 인천개항사를 통해 본 식민근대』, 인천문화재단, 2011.
- 양준호·민운기·이희환, 『인천의 도시공간과 커먼즈, 도시에 대한 권리』, 보고서, 2019.
- 위엔진(袁進), 「상하이는 왜 중국 근대문화의 중심이 되었는가」, 『개항과 동아시아, 텍스트의 안과 밖』, 동아시아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8.
- 오카다 도모히로, 『지역 만들기의 정치경제학-주민이 직접 만드는 순환형 지역경제』, 한울아카데미, 2016.
- 사사키 마사유키(佐々木雅幸), 「내발적 발전과 창조도시」, 『시각』 2018년 9·10월호.
- 「제물포 경제자유구역' 청사진 짜다」, 『인천일보』 2023. 8. 3.
- 장동민, 「가짜 슬로건의 도시, 인천이라는 거울」, 『인천in』 2025. 10. 10.
- 藥師寺知隴·小川雄三 編, 『新撰 仁川事情』, 朝鮮新報社, 1898. p.3.
- 梁峻豪, 「仁川市の「經濟自由区域」プロジェクトに関する考察 —「企業主義的」地域政策に対する批判的検討を中心に—」, 『地域経済学研究』 第31号, 日本地域経済学会, 2016. 6. 30.

■ 국문초록 ■

인천의 도시 정체성과 도시비전에 대한 성찰

이 희 환

인천도시문화연구소 소장

1883년 개항 이후 근대도시로 변모한 인천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근대문물이 들고 나는 개방적인 관문도시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을 겪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가 작동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도시정체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분단-냉전체제 아래 개발독재시기를 거치며 급속한 압축과 팽창을 거치며 성장제일주의로 치달아온 인천의 어느덧 도시정체성이 모호한 도시가 되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도 성장 일변도의 도시기업가주의 정책으로 시종해왔다. 기후 위기시대가 도래한 이때, 서울 옆에 붙은 수도권도시로 인천은 이제 지방분권을 선도하면서 성장 일변도의 도시정책을 지양하고 도시의 내재적 순환과 성숙을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비전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핵심주제어 : 인천, 압축, 팽창, 도시정체성, 도시비전, 도시기업가주의, 기후위기

■ Abstract ■

Reflections on Incheon's Urban Identity and Urban Vision

Lee, Hee-Hwan

Director of Incheon Urban Culture Research Institute

Incheon, which transformed into a modern city after its port opening in 1883, was an open gateway for modern civilization due to its geographic location. However, the city suffered colonial invasion by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following World War II, coupled with the East-West Cold War, severely damaged its identity. Under the division and Cold War, Incheon experienced a period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rapid compression and expansion, and a growth-first focus. This led to an ambiguous urban identity. Even in the era of local autonomy, Incheon continued to pursue growth-focused urban entrepreneurship policies. Now, as a metropolitan city adjacent to Seoul, Incheon must lead the way in decentralization, abandoning growth-focused urban policies and fostering a new urban vision that promotes internal circulation and maturity.

Key-words : Incheon, Compression, Expansion, Urban Identity, Urban Vision, Urban Entrepreneurship, Climate Crisis